
이슈브리프

2016. 10. 13

- Ⅰ. 현장 중심 방재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/ 1
- Ⅱ. 제조업혁신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필요 / 6
- Ⅲ. 일본의 복핵문제 대응전략 / 11

〈이슈브리프〉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,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·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보고서의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I. 현장 중심 방재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¹⁾

최근 발생한 지진·태풍 등 재해·재난으로 한계를 드러낸 안전관리체계는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책임 강화 및 현장(시·군·구) 중심 방재안전관리체계로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줌. 이를 위해 ▲국민안전처 및 지자체 주무관 대상 긴급대응관리 교육훈련 실시 ▲국민안전처 주무관의 1인 1지역 재난정보 책임관리 ▲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교육·훈련 ▲재해·재난 관리를 위한 담당관들의 대통령(국가)앞 서명식 거행 등이 필요함.

1. 한국적 재해·재난의 특성과 종류

○ 한국적 재해·재난의 특성

- 압축성장에 기인한 안전불감증, 사고불감증, 대응불감증 팽배
- 시설과 설비의 노후화(사용수명 \geq 설계수명)
- 국민 불편성 해소와 경제성의 이유로 각종 안전규제의 완화
- 인구와 시설의 고밀도·고가화로 인한 위협의 복합화, 고도화, 다발화
- 교육체계의 변화로 인한 기술·기능인력 구조의 붕괴
- 안전인프라 및 안전교육 인식 부족

1) 이 보고서는 조원철 명예교수(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)의 연구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

○ 발생 가능한 재해·재난의 종류

- 자연재해

- 자연적인 원인(현상)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해·재난
- 지진, 태풍, 해일, 화산, 폭우, 폭설 등

- 시설·기술재해

- 각종 시설물(생활·산업·문화·교육시설 등)에서 자연재해, 인적, 물적인 요소들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
- 구조물 붕괴, 화재, 폭발, 독극물 누출, 원전사고 등

- 사회적 재해

- 사회적 불안, 경제적 여건 등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인적 재해
- 자살, 빈곤, 범죄, 테러 등

- 관재(官災)

- 관리규정이 없거나 기준혼재와 미비, 기관간의 이해 상충, 정치적 의도성, 잘못된 규제 등으로 인한 관리상의 재해·재난
- 선박 선령 연장은 전형적인 관재에 속함

2. 국민안전처의 현행 방재안전관리체계 평가

○ 국민안전처, 재난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이해가 매우 부족

-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(처) 훈련이 필요함

- 특히 공직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역할(직무)에서는 최고이기를 기대함

○ 국민안전처의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지를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(매뉴얼) 필요

- 한반도와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/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응할 간단명료한 대처방안을 정리
- 국민안전처의 매뉴얼은 국민 각자의 상황, 특히 능력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구성되는 매뉴얼을 국민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

○ 국민안전처의 자기훈련을 통해서 처의 역할을 공감하고 공유하여 직렬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집행할 수 있어야 함

- NIMS(긴급대응관리시스템)을 안전처의 구성원 모두가 훈련해야 함

3. 방재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

○ 국민안전처의 주무관을 대상으로 긴급대응관리(NIMS) 교육훈련의 실시

- 구체적인(위치, 시간, 재난종류) 재난상황을 부여
- 각자가 1시간 내에 3일간의 (시군구 단위) 현장관리 계획과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

- 내용을 평가하여 후에 인사고과평가에 반영
- 매 2주마다 (상황을 달리하며) 실시

○ 국민안전처 주무관의 1인 1지역 재난정보 책임관리

- 1인(주무관 이상) 1지역(시군구)을 책임관리
- 지역의 최빈발생 10대 재난을 발굴하고, 재난특성(지리적 특성, 발생 재난 특성, 발생재난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 등)을 파악
- 장단기 긴급지원계획 수립 및 비상통신망 확립(방재자원 - 예산, 장비, 물자, 인력, 정보, 교육훈련 등과 지원시기와 수단,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)
- 성과의 평가와 인사고과에 반영

○ 자치단체(시군구와 시도)의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주무관 이상의 간부들에게도 지역긴급대응관리(CIMS) 교육훈련의 실시

- 시군구에 지역자율방재단(CERT) 조직 및 교육/훈련
- 구체적인 (위치와 시간과 재난종류) 재난상황을 부여
-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/훈련/상황의 참여상태 평가에 따라 지원
- 내용을 평가하여 후에 인사고과평가에 반영

○ 지역자율방재단(CERT)의 확립 및 교육/훈련

- 참여대상 : 읍면단위의 장, 중장비 소유자 및 운전자, 각종 기능인력 (자격증 소지자), 의료기관장, 적십자 등 봉사단체, 애향청년회, 해병 전우회, 특전사전우회, 종교단체, 금융기관, 농수임축 단체장, 사회단체장, 예비군, 지역주둔군, 기타 자원참여자
- 읍면단위로 조직, 년2회 소집하여 교육/훈련 - 소집상태(시간, 역할 분담 등) 부여
- 동원되는 중장비에 대한 1일 단가는 매년 초에 협약

○ 자치단체별로 국제안전도시 인증(UNISDR)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

- UNISDR 기준의 10개 항목 41개 평가내용을 자율적으로 평가
-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재평가
- 평가내용이 모두 만족하면 UNISDR에 최종평가 요청 및 인증취득
- 인증을 받으면 고시/홍보, 유지관리하며,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음
-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과 “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”는 안전의식 배양

○ 민방위훈련의 실질화

- 가족단위로 계단 내려오기 훈련

- 대피가능한 장소의 지정과 사전 홍보와 인지 훈련
- 민방위 기본용품 갖추기 - 코와 입막음용 소형비닐봉지, 물병, 마스크, 수건, 손전등, 라디오, 먹거리 등

○ 재해·재난 관리를 위한 필요기능의 주무기관장들과 주무부서장들의 대통령(국가)앞 서명식 거행

- 재해·재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들의 주무부처장과 주무부서장들이 대통령(국가) 앞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는 서명식을 거행, 재해·재난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의 인식을 고양

[작성: 장경수 선임연구원 ☎ 02-2070-3327]

II. 제조업혁신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필요¹⁾

독일과 미국·일본 등 전통적 제조업 강국들이 IT와 융합된 첨단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제조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 중이며,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. 이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제조업 혁신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국내실정을 반영한 차별적 스마트공장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스마트공장 활성화에 대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수립·시행하면서, 장기적으로는 시장중심의 스마트공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뒤편 할 것임.

1. 주요국들, 제조업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추진

- 최근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再조명
 - 미국, 독일, 일본 등 전통적 제조업 강국 및 중국 등이 첨단 제조기술의 개발과 IT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추진 중
 - 3D프린팅, 지능형로봇, 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(AI) 등 제조업 분야 차세대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
 - (미국) 연방정부 차원에서 첨단제조업의 혁신 및 스마트 제조시스템 구축정책 추진
 - (독일) 기존의 ‘인더스트리 4.0’ 정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조공정의 디지털화, 표준화, 데이터보안, 제도정비, 인력육성을 골자로 한 ‘플랫폼 인더스트리 4.0’ 정책을 추진

1) 여의도연구원 주최 “스마트공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(2016.9.27)”에서 발표·토의된 내용 및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

- (중국) 작년 5월 ‘중국제조 2025’를 통해 글로벌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10大 성장동력분야를 선정, 2025년까지의 전략적 육성방안을 제시

○ 각국의 제조업 혁신전략의 핵심요소로 스마트공장(smart factory)이 급부상

- IoT, 빅데이터 등 최신의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으로 제조업의 효율화·최적화 추구

※ 스마트공장이란 기획·설계, 생산, 유통·판매 등 쏘과정을 ICT로 통합, IoT(디지털화), 빅데이터(지능화), Cloud(가상화) 등을 통해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을 의미

| | |
|-------|--|
| 기획·설계 | 제품성능 시뮬레이션 → 제작기간 단축, 맞춤형 제품 개발 |
| 제조·공정 | 설비-자재-시스템간 실시간 통신 → 다품종 대량생산, 에너지·설비의 효율 제고 |
| 유통·판매 | 모기업-협력사간 실시간 연동 → 재고비용 감소, 품질·물류 등 쏘분야 협력 |

- 高품질·高정밀 자동생산, 소비자 맞춤형 유연생산, 효율적 생산자원 관리, 공정비용 절감,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의 효과 기대

○ 글로벌 스마트공장 추진 동향

- 세계 스마트공장 시장규모는 연평균 8% 가까이 증가하여 2018년 1,705억 달러, 2022년에는 2,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(M&M)
- 시장점유율로는 독일의 지멘스(15%), 미국의 로크웰 오토메이션(11%), 스위스의 ABB(11%), 미국의 에머슨(9%), 일본의 미쓰비시(7%) 順

(단위: 10억 달러)

| 연도 지역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성장률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유럽 | 38.4 | 40.8 | 43.4 | 46.2 | 49.3 | 6.4% |
| 미주 | 42.0 | 45.0 | 48.3 | 51.8 | 55.7 | 7.3% |
| 아시아 | 36.76 | 40.7 | 45.1 | 50.1 | 55.6 | 10.0% |
| 중동 | 6.7 | 7.4 | 8.3 | 9.1 | 9.9 | 10.7% |
| 합계 | 123.7 | 133.9 | 145.1 | 157.2 | 170.5 | 8.3% |

- (독일) 플랫폼 인더스트리 4.0을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에 박차
 - 쉐 기업의 31%는 인더스트리 4.0 내에서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, 36%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계획하거나 테스트 중인 것으로 조사됨(Staufen AG, 2015)
- (미국) 연방정부에서 향후 5억 달러 이상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약속하고 16대 첨단제조업 육성정책을 채택

2. 국내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 동향

- 정부는 2014년 6월 발표한 ‘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.0전략’의 일환으로, 스마트공장의 보급·확산사업을 추진 중
 - 2020년까지 1만개 공장 스마트화 과제 추진 계획
 - 民官합동 ‘스마트공장추진단’을 설립하여 스마트공장 기술개발, 보급·확산, 표준·인증 등의 관련사업 총괄(2015.6)

- 다양한 형태의 미래형 모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
- 이러한 정책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나,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
 - 2016년 9월말 현재 2,045개社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으며, 금년도 추경예산 확보로 450개社 이상의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
 - 제조공정 최적화, 생산성향상, 불량률 감소 등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일정 부분의 성과 달성
 - 하지만, 제조업의 근간인 ‘뿌리산업 중소기업’의 72.9%가 스마트공장을 모르는 등(중기중앙회, 2015), 지속적 홍보가 필요한 실정

3. 전망 및 정책제언

【전망】

- 국내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
 - 내년도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율 및 노동생산성이 각각 26%와 55%로 예상, 올해에 비해 개선될 전망(산업통상자원부)
 - 제조공장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LS산전, 포스코 ICT,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·중소기업들도 스마트공장 구축 후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함으로써 스마트공장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임

○ 향후 스마트공장 관련 국내 시장규모 큰 폭 증가 예상

- 산업용 로봇, 센서,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공장 관련 국내 시장규모는 32억 달러(2015년 기준)로 연평균 11.2% 증가

○ 산업간 융합을 위한 인력, 자본, 핵심기술의 부재 및 직접고용의 감소 등의 일시적 제약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음

- 기업간 기술·인력격차가 심한 편이며, 특히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역량이 매우 취약

【정책제언】

○ 국내실정을 반영한 차별적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필요

- IT기반의 원천기술 개발 및 시장창출, 표준화 등 핵심적인 스마트공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
 - (독일) 강점분야인 임베디드 시스템 등을 결합한 플랫폼 선점전략에 집중
 - (일본) 모노즈쿠리 고도화, 전원참가형 제조업경쟁력 구축과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

○ 스마트공장 활성화에 대비, 양질의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·추진

- 제조공정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에 따른 직접고용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연관산업의 간접고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형태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임(산업研, 2016)

- 고숙련,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외이전 제조공장 및 연관 인력의 회귀를 기대할 수 있음

- 기존 숙련인력의 재교육 및 스마트공장 신규인력 양성 지원

○ 장기적으로는 시장중심의 스마트공장 활성화에 주안점

-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는 예산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, 정부에서는 관련산업의 육성과 표준화, 고용창출과 글로벌 협력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되, 관련시장의 창출, 기술개발, 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시장 참여자들간의 가교역할에 충실할 필요

- 특히 스마트공장을 지향하는 중견·중소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금융모델 제시 및 금융지원방안 마련, 추진

[작성: 이종인 연구위원 ☎ 02-2070-3325]

Ⅲ. 일본의 북핵문제 대응전략¹⁾

일본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자국 안보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, 오히려 유사時 후방지원의 핵심이 되는 일본이 북한의 제1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다차원의 억지를 추진 중임. 이에 일본은 對北 억지태세 구축을 위해 한·미·일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면서, 특히 한·일간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(GSOMIA)과 상호군수지원협정(ACSA)의 체결이 시급함을 강조.

1. 일본의 우려 : 안정 · 불안정의 역설

○ 핵긴장 고조 가능성

- 북한의 ‘능력’, ‘의도’, ‘인식’ 등의 불투명성·불확실성 등으로 북핵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(deterrence)태세 구축이 쉽지 않음
- 북핵에 대한 억지의 강화가 일본 안보의 새로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설에 유의
 - ※ 안정·불안정의 역설(stability-instability paradox) : 핵갈등은 전면전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‘안정’적이지만, 저강도의 무력분쟁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‘불안정’해 질 수 있음

1) 이 보고서는 일본의 외교안보분야 대표적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(JIIA) 발간 『朝鮮半島情勢の総合分析と日本の安全保障』(2016.6) 내용 중, 토사키 히로후미(戸崎洋史; 군축·비확산촉진센터 주임 연구원)의 “北朝鮮の核問題と日本の抑止態勢 - 現状と課題”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

- 한·미·일의 억지 강화를 북한이 對北 선제행동이나 체제전복의 목적으로 잘못 인식할 때, 북한은 위기감이 높아져 핵전력 증강, 더 나아가 체제 생존이 걸린 재보복 감행 가능성이 있음

○ 일본이 북핵의 제1 목표가 될 가능성

-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고, 제1의 억지 대상국 역시 미국임
- 그러나, 일본은 북한의 핵공격과 핵위협을 제1 목표는 한·미가 아니라 일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
 -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개혁으로 한반도 사태 발생時 일본의 후방지원 내용을 확충, 집단자위권의 한정적 행사가 가능
 - 일본의 對북한 억지 강화의 부작용으로 북한이 對일본 핵공격 및 위협을 고려하게 하는 결과 초래
 - 북한, 對日 핵공격 위협 수단을 통해 일본을 한·미·일 동맹에서 따로 분리시켜 한반도 사태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
 -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지만, 對日 핵공격·위협 양태에 따라 혹은 북한의 對美 핵공격의 우려로 말미암아 미국의 핵 보복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
 - 북한은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악몽으로 인해 핵공격의 위협에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
 - 또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구실로 對日 핵사용을 정당화할 가능성

2. 일본의 억지 과제

○ 거부적 억지태세 : 유사시 대처수단으로 불가결

- 2013~2015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개혁으로 현재 헌법해석 및 안전 보장정책 상으로는 일본은 거부적 억지태세(deterrence by denial)를 유지하고, 징벌적 억지(deterrence by punishment)는 미국의 확대억지에 의존한다는 것이 기본방침

※ 거부적 억지 : 적의 공격에 대한 저지·격퇴로 적의 목적달성을 거부하는 (불가능하게 만드는)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단념케 하는 것, 즉 공격해봐야 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토록 하는 것임

※ 징벌적 억지(보복적 억지) : 엄청난 보복으로 인해 이득을 상회하는 비용을 적에게 안겨줌으로써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. 즉 공격을 하면 더 큰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토록 하는 것임

- 일본의 거부적 억지 강화는 확대억지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,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미국과의 안전보장협력으로 미·일의 정치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

- 일본의 거부적 억지 능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처 하는 수단으로서 필수불가결

-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촉발요인과 관련, ▲북한이 상황을 오판 하거나 지도부의 잘못된 자신감 ▲우발적 事故 ▲긴장상태에서 최고 지도부의 승인없이 사용 ▲체제붕괴에 직면하여 자포자기 상태에서 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

○ 탄도미사일 방어망(BMD) 강화

- BMD는 일본의 現 안전보장정책 하에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·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
- 그러나, ▲미사일의 수적 열세에 대한 대응 ▲기습공격에 대한 대응 ▲미국 및 미군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
- 동북아 위기時 미·일이 전개 가능한 요격 미사일 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, 이지스함 BMD는 이지스함 1척당 8발(SM-3 블록1A)이 탑재
 - ※ 미·일이 전개하는 이지스함을 최대 10척 정도로 생각한다면 80발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(북한의 노동미사일은 200여기 추산)
- 북한 노동미사일은 7~10분 정도면 일본에 도달하기 때문에 기습공격 대처를 위한 즉시 요격태세가 필요한 만큼 <新미일방위협력 가이드라인>의 '평시부터의 협력조치'에 들어있는 정보수집, 경계감시, 정찰을 강화해야 함
- 자위대법 82조 3항은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면 요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, 일본이 존립위기사태로 인정하기 이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도 필요

○ 敵 基地 공격

- 적극적 방어조치로 적 기지(근거지) 공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, 일본의 단독조치는 현실적이지 않고 미일동맹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
- 다만, 자위권 행사의 3가지 요건인 ▲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긴박한 공격 ▲다른 적당한 수단 부재 ▲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일 경우 일본의 적 기지 공격 수행도 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됨
- 그러나 이는 현실성도 떨어지고, 일본은 독자적인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한국의 강력한 반대도 있을 것임

○ 한·미·일 협력

- 對北 억지태세 구축을 위한 한·미·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며, 한·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(GSOMIA)과 상호군수지원협정(ACSA) 체결이 필요
- 특히 BMD에 있어 한·미·일 3국간 센서 정보의 공유가 요격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, 2012년 체결 직전에 한국 국내사정으로 연기된 한·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

3.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

○ 일본은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'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'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및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만 행동해 온 자위대의 행동반경 확장 추진

- 최근 일본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미군측에 탄약, 공중급유 등의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미·일 ACSA(군수지원협정)을 개정
- 미일동맹 강화 및 북핵 대응의 명분 아래 자국의 군비증강 및 對중국 견제를 위한 실리적 포석

○ 한·일 군사정보 협력 재추진 전향적 검토

- 현재 한·미·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을 경유해야 하고,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어 사실상 '안줘도 그만'인 방식
- 북한의 SLBM을 비롯한 미사일 위협의 위중함을 감안할 때, 일본의 군사정보(6기의 정찰위성과 6척의 이지스함)의 활용을 위해서도 한·일 양국의 군사정보 협력이 필요함

[작성: 통일연구센터 최원용 연구위원 ☎ 02-369-7949]